

2022년까지 전남 바다에 다리 15개 개통

1조 5750억원 투입 ... 올해만 2592억 지출

여수·고흥·신안·영광 등 섬 교통 편의 향상

오는 2022년까지 전남도 해역에 15개의 다리가 놓인다. 이에 따라 여수, 고흥, 신안, 영광, 완도, 진도 등의 섬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5년간 이들 연륙·연도교 건설에 드는 예산만 1조5750억원(추정액)에 이르고 올해 25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신지와 고금에 있는 장보고대교(연장 1305m 사업

비 960억원)를 시작으로 2022년 암태와 추포를 잇는 연도교(955m 470억원)까지 모두 15개의 연륙·연도교가 전남 해안을 수놓게 된다.

2017년 신안 하의~신의 노벨교(550m 706억원), 2018년 암태~암태 새천년대교(7220m 5615억원), 신안 자라~안좌(670m 466억원), 고흥 사양~와교(420m 369억원) 등이 잇따라 개설된다. 2019년은 여수

남도, 둔병 조발, 화양을 잇는 연륙·연도교 4개가 한꺼번에 들어선다. 남도대교(740m 549억원), 둔병·조발대교(1630m 1433억원), 화양대교(854m 1026억원) 등이다. 영광과 해제를 잇는 칠산대교(1820m 1696억원)도 같은 해 통행이 가능해진다.

2020년에는 지도~임자 연도교(1885m 1704억원), 진도 하조도~나배 연도교(360m 290억원), 2022년에는 완도 노화~소안 연도교(780m 466억원) 등이 각각 개

통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는 지난 2015년 거문도 서도와 동도를 잇는 연도교(530m 507억원)를 포함해 모두 49개의 연륙·연

도교가 있다. 총연장은 3만4964m에 지금 까지 3조3754억원이 투입된 결과다.

2022년까지 15개가 개통될 경우 64개에 이르며, 연장도 4만m를 훌쩍 넘게 된다. 전남지역 물과 섬, 섬과 섬을 연결되는 연륙·연도교는 모두 104개가 계획돼 있으며, 총연장은 11만2633m에 투자액은 11조 13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만큼 섬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객 진출입을 위해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가진 다리들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근혜 퇴진 촉구 박 깨뜨리기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2·25 민주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박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탄핵 관철 위해 야3당 상설협의체 운영을”

최성 고양시장 광주전남언론포럼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철을 위한 야3당 상설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광주전남언론포럼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야3당 공동개혁정부를 수립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촛불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탄핵 관철을 위한 야3당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탄핵 이후에는 이차적으로 야3당 공동개혁 정부 수립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설협의체를 통해 집권 후 개헌 조기추진 및 개혁정책 연대 등 야3당 공동정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국민 앞에 공표하면 된다”



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차기 대통령과 야3당 공동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치분권·권력구조 개헌을 임기 1년내 마무리하고 정권·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4차산업 혁명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지역공약으로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본격 추진,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아시아 국제 인권재판소 유치, 신재생에너지·바이오 헬스·자율주행차·우주항공산업 등 4차산업 집중 육성 등을 내놨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올 전기자동차 553대 보급

시군당 1800만원~22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477대, 공공 76대 등 55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113억원의 보조금을 투입될 예정으로, 지난해까지 924대가 보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시·군에 따라 대당 최소 18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완속충전기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기아 레이·쏘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등 총 8종이다.

전남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면 전기자동차 신

차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공공 급속충전기 20기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지역에는 20개 시·군의 공공기관,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모두 52기의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어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총 72기가 된다.

공공급속충전기는 전기차 구매 시 개인에게 지원하는 완속충전기와 달리 국가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충전 시간은 30분 이내로 짧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차량 소유자가 장거리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 청년 자립 성장 사다리 놓는다

경제·복지·문화·참여 등

청년정책 4분야 63개 사업

광주시가 올해 청년정책으로 경제·복지·문화·참여 등 4개 분야 63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4일 최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2017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4개 분야 신규사업 17개(64억원), 계속사업 46개(499억원)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과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다는 방침에 따라 ▲광주청년드림사업 ▲광주청년 창업펀드 결성·운영 ▲청년창업 특례보증 ▲구직청년 교통카드 ▲학자금 이차지원 확대 ▲청년 건강권 보장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쿠키제 ▲2017세계청년 축제 ▲청년정책 협치 강화 ▲청년운영 공간 교류활동지원 등 10대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드림사업은 직장과 진로를 정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활동 비

용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이다.

특히 대상 청년들이 공공기관형, 사회적경제형, 사회복지형, 기업형, 청년활동가형, 자기주도형 프로젝트형의 6개 유형에 맞춰 관심사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구직청년 교통카드 발급 사업도 도입해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진 청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등 경제 분야 27개 사업, 빛고를 장학재단 운영 등 복지분야 11개 사업, 청년 창의콘텐츠 개발지원 등 문화분야 9개 사업, 광주 청년센터 활성화 등 참여분야 16개 사업도 추진된다.

또 청년부채TF팀 운영과 청년주택 100호 공급, 청년창업자 셰어하우스 운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청년의 미래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선6기의 중심을 청년에 놓았다”며 “올해는 청년들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당당히 지역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지자체 수도권 노후 누수율 27%

광주, 세종시 제외 광역시 중 유일하게 10% 넘어

전남 일선 시·군 수도물의 4분 1 이상이 수도권 노후로 인해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역시 광역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누수율이 유일하게 10%를 넘었다.

14일 환경부가 발표한 상수도(201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누수율은 27.0%에 달했다. 연간 총급수량 2억1896만6000m³ 가운데 무려 5910만 2000m³의 수돗물이 새고 있는 것이다.

2014년 26.1%와 비교해 0.9%포인트 늘었다. 수도관의 노후화에 맞춰 이를 신설·교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수도권 총연장 19만7535km 중 21년 이상 지난 것이 5만8545km(29.6%)에 달하며, 이들 노후관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 고흥군이 62.7%에 달해 수돗물 절반 이상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례가 47.5%, 보성 44.3%, 신안 43.6%, 곡성 42.4%, 완도 40.7% 등 5곳이 40%대를 넘었다. 목포가 유일하게 누수율 8.6%로 10%대 이하를 기록했다.

광주 누수율은 10.1%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10%를 넘었다. 대전(4.6%), 부산(4.4%)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전국 평균 생산원가(당 882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676억원 어치의 수도

물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곳은 진도 군으로 2872원에 달했다. 2000원이 넘는 곳도 완도(2390원), 화순(2382원), 신안(2120원) 등 3곳이나 됐다. 시·군 평균 생산단가는 1321원이지만, 평균 요금 단가는 82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62.4%에 불과했다.

시·군별로 진도군 현실화율은 17.9%로 생산원가는 2872원에 달하지만, 물값은 514원에 불과했다. 생산원가 대비 요금이 절반에 못 미치는 곳도 화순(31.8%), 장흥(33.1%), 완도(39.0%), 무안(39.8%), 나주(44.8%) 등 5곳이나 됐다. 광주 수도요금은 571원으로 생산원가(634원)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90%였다.

1일 1인당 급수량은 광주가 319ℓ, 전남은 357ℓ로 전국 평균 335ℓ와 비교해 광주는 다소 적고, 전남은 많았다. 영암군은 무려 600ℓ로, 가장 적은 장성군(192ℓ)의 3배 이상을 보였다.

급수보급률은 광주가 99.9%로 대부분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전남은 95.4%다.

수돗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은 광주가 17437가구에 3231명, 전남은 7만7534가구에 16만3193명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경이로움,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여기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